

#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4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5일

발 의 자 : 이영준 의원

### 1. 개정이유

- 하남시 지역은 대부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번 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사육이 가능한 사항을 일부 신설 및 추가 허용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8호 신설)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3월 5일 ~ 3월 10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7. 부서협의 결과 : (하수도과)

○ (안)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제2항

- 부서검토의견 : 법률자문(내부, 외부) 과 법제처 유사사례 검토 결과 조례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법」의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당초 검토의견(2020. 11. 24.)과 같이 조례개정 없이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틀을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조례개정 부동의

☞ 검토의견 :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외체육시설 설치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 조례 제 호

##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시장  
이 배치 공고하여 선정된 가축과 관련한 실외체육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b></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li> <li>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li> <li>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li> <li>4. 동물(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li> <li>5.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li> <li>6.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를 포함한다)·돼지·말·사슴, 5마리 이하의 개·양,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li> <li>7. 제한구역 내 기존에 설치된 가축사육 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li> </ol> <p><b>&lt;신 설&gt;</b></p>	<p><b>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7 (현행과 같음)</p> <p>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시장이 배치 공고하여 선정된 가축과 관련한 실외체육시설.</p>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준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 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 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2014. 1.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인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垔)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